▶▶ 매일 INDEX

4면
서거석 교육감 "안전한 학교 만들겠다"

전주매일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음 1월 16일) 제36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시의회와 간담회를 연 김관영 도지사

"올림픽, 막판 대역전 가능성 있다"

하계올림픽 유치 적극적 협력 약속

완주전주 통합 관련 "늦어도 7월 말 결론"

12일 김관영 도지사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간담회를 마친 뒤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36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올림픽 유치 활동이 서울에 비해 많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막판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등과 관련해 이날 오후 전주시의회에서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김 지사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38개 종목단체 회장들을 모두 외우고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1%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자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50%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달 28일까지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출해야 하는데, 최대한 지지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홍보동영상 공유 등 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우리의 노력이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올림픽 유치는 물론 그 이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 협력과 다양한 활동을 약속했다.

올림픽 유치 전략과 관련해 시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가진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대해 7월말까지 결론이 난다고 보고 총력전을 펼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조기 대선이 있어 도지사나 시장이 통합찬반투표를 붙이기 만만치 않다는 말을 하는데, 5월에서 7월로 두 달 늦어질 가능성은 있어도 법상 투표를 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 "여론조사를 보면 전주시민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완주군민의 투표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다"며 "전주에 계신 분들이 통합시 이후의 비전에 대한 설명 역할을 강화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지역 통합찬성단체에서 107개 사업을 건의했는데 시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도에서는 통합됐을 때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못박는 조례를 2월에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1GW 규모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의결… 고창 200MW 민간 공모 · 부안 800MW 공공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통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1GW 규모 '확산단지1'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0.4GW 시범단지에 이어 확산단지가 확대되면서 국내 최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부안 해역에 총 14조4,000억원을 투자해 2.46GW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는 원전 2.5기에 버금간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GW 규모의 확산단지는 기존 실증단지(60MW)와 시범단지(400MW)에 이어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고창과 부안 두 지역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창 인근 해역 200MW 규모의 단지는 민간 발전사업자를 공모해 조성하고, 부안 인근 해역 800MW 규모 단지는 발전공기업 주도의 공공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계획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라 지역사회도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해상풍력 발전이 본격 가동되면 20년간 매년 REC 배당금이 지급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련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 추가 지정은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천만 관광도시 향해 '정조준'

익산시, 역사 · 미식 등 주제로 관광상품 준비중

철도 테마 등 맞춤형 상품 개발 통해 관광객 유치

익산시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출발선에 섰다. '맛과 멋, 쉼이 있는 여행'이 역주의 전략이다.

익산시는 역사부터 미식, 농촌, 어린이, 반려동물 등 다양한 주제로 알찬 관광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은 고대·근대역사 문화유산, 금강·만경강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 비옥한 토지에서 자란 지역 농산물과 맛집, 호남 교통의 중심 익산역, 대형 축제와 가족 관광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지난해 관광객 5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 7일 '1,000만 관광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지금까지 구축해 온 관광산업 기반에 특색있는 테마형 관광상품을 더해 명실상부한 천만 관광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다.

익산은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지다. KTX와 SRT가 정차하는 익산역에서는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3개 철도 노선이 분기한다. 특히 서울에서 고속 열차로 1시간 15분이면 익산역에 도착하는 만큼 수도권 관광객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는 올해도 이 같은 강점을 살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협업으로 계절마다 다른 테마의 철도 연계 관광을 추진한다. 익산역에 내린 열차 승객들은 시티투어를 활용해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평일에는 테마형 시티투어가, 주말엔 순환형 시티투어가 운영된다. 지역에 산재한 종교 성지와 정원, 축제와 연계한 특별 여행 코스가 준비돼 있다. 보석박물관 무료입장의 혜택도 주어진다.

테마형 상품으로는 4대 종교 성지를 순례하는 '고백 시티투어'와 익산의 멋진 야경을 즐기는 '야경투어'가 있다. 올해는 익산의 대표 향토기업인 하림을 방문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관광객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여행상품을 제공한다.

시티투어 요금은 인당 2,000원이며 익산시민을 비롯한 감면 대상자의 경우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익산 관광 명소 곳곳을 원하는 대로 둘러볼 수 있어 올해도 많은 관광객의 발이 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익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2015년 백제역사유적인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에 발맞춰 시는 올해 백제역사유적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고도 한눈애(愛) 세계유산센터'를 시티투어 코스에 추가해 관광객에게 지역의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익산의 맛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미식산업계'를 신설했다. 미식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미식관광에도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시는 올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2028년 까지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이 가능한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국비 10억 원을 포함,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익산의 대표 축제와 연계한 관광열차 상품의 내용에 단체관광의 노하우를 녹여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 등 야간형 행사와 연결한 1박 2일 체류형 상품과 야간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단체관광객을 위한 활동·체류비 인센티브 지급과 미륵사지나 왕궁유적을 활용한 행사 유치 등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20명 이상 축제 방문 단체에는 버스 1대당 40만원을 지원하며, 일반 단체 관광객에게는 1인당 최대 2만2,000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단체에는 1인당 최대 2만5,000원을 지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